

1970~1980년대 한국 사회과학 분과학문의 제도화와 전문화

김성은

한국학중앙연구원 현대한국연구소 전임연구원, 사회학 전공

cocozza@hanmail.net

- I. 머리말
 - II. 전문 학회와 학회지의 아카데미즘 형성
 - III. 대학에서 분과학문별 학과의 설립
 - IV. 한국 사회과학의 정체성과 전문성
 - V. 맺음말
-

본고는 필자의 박사학위논문 「한국 사회과학의 전문화와 대중화」(2015) 일부를 수정·보완하여 작성한 것이다.

I. 머리말

한국의 사회과학은 근대계몽기에 잡지와 신문 등을 통해 서구의 사회과학 지식을 수용하면서 형성되기 시작했는데, 일본의 식민 지배로 인하여 제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해방 후 3년의 미 군정기를 거치면서 미국식 고등교육과 연구 체계의 기틀이 형성되었으며, 한국전쟁 이후에는 정부의 정책과 미국의 인적·물적 지원 등에 힘입어 사회과학의 제도화가 급속도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대학 제도에 사회과학 개념이 명확하게 도입된 것은 1970년대 중반 이후의 일이며, 오늘날에도 사회과학의 범주와 분류에는 모호한 면이 적지 않다.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성격이 제각각인 분과학문들과 다양한 지식이 사회과학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로 묶이는 경향이 있다.

서구에서나 한국에서나 학문에 대한 분류와 이름 붙이기는 학문의 속성을 면밀하게 검토한 끝에 내려진 결정이라기보다 제도적 우연에 따른 결과인 경우가 많았다. 연구자의 이합집산이 제도화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는데, 이를 위해서는 직업적 기반을 마련해주는 대학의 학과와 연구자들의 모임인 전문 학회의 형성이 가장 중요했다. 즉 하나의 학문이 제도적으로 확립되기 위해서는 대학에서 연구자가 전문직업인으로 자리를 잡아야 하며, 이러한 전문직업인들이 모임을 결성하여 자율적인 장(場)을 형성해야 한다. 대학의 학과와 전국적인 규모의 전문 학회는 근대학문이 제도적으로 성립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과학의 제도적 성립을 대학의 학과, 전문 학회 등의 설립과 이에 대한 사회적 투자의 증가를 기준으로 본다면, 비록 시기가 늦긴 했지만, 한국 사회과학의 제도화는 매우 압축적으로 전개되었고 형식 면에서는 서구나 일본과 큰 차이가 없었다. 대학마다 사회과학 분과학문별 학과가

설치되고 분과학문을 대표하는 전문 학회들이 설립되면서 1970년대에 이르러서는 형식적인 제도화가 거의 마무리되었다. 1975년 서울대학교의 종합화를 계기로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의 분과학문 체계가 대학 제도에 정착하고, 1976년 분과학문별 전문 학회의 연합체로서 사회과학연구협의회가 설립되면서 한국의 사회과학계가 형상을 갖추기 시작했다.

본고에서는 사회과학 분과학문 중 대표적인 사례로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의 제도화와 전문화 과정을 분석하였다. 경제학의 경우 식민지 시기 전문학교의 상과(商科)나 경제과부터 학과의 이력을 기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해방 후 전문학교에서 대학으로 전환되었을 때 대부분 곧바로 경제학과를 설립했다. 정치학은 주로 정치외교학과로 설립되었는데, 역시 해방 후 서울대학교와 주요 대학들이 정치학 관련 학과를 지닌 채 출범하여 한국전쟁 직전에 첫 번째 졸업생들을 배출할 수 있었다. 사회학은 경제학, 정치학에 비해 제도화가 늦었다. 해방 직후에는 오직 서울대학교에만 사회학과가 있었으며 두 번째 사회학과는 1954년에 경북대학교에 설립되었다. 변시민의 회고에 따르면, 사회학은 사회주의 학문으로 오해받는 경향이 있어서 식민지 시기에 경찰의 감시 대상이 되었고 해방 후에 여러 대학이 사회학과 설치를 희망하였으나 한국 정부 역시 오랫동안 허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다만 1946년에 서울대학교가 개교하면서 곧바로 사회학과를 설치한 것은 사회학을 미국의 학문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한 미군정 때문이었다.¹

한국에서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을 대표하는 전문 학회는 한국경제학회, 한국정치학회, 한국사회학회인데, 이들은 각각 학회지인 『경제학연구』,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사회학』을 통해 저널리즘과 차별되는 아카데미즘을 추구하였다. 초기에 일반 잡지와 큰 차이가 없던 학회지들은 점차

1 변시민, 「회고」,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학회 50년사』(2007), 16쪽.

상업적인 영역에서 벗어나 학회원들만을 위한 기관지로 자리매김하였으며 게재하는 연구논문의 형식과 내용에 대한 규범을 엄격하게 정함으로써 전문적 지식의 생산과 보급을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매체가 되었다.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은 제도화의 규모와 초기 양상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1950~1960년대에 형식적 틀을 갖춘 후 1970~1980년대에 양과 질 모두에서 실질적인 제도화로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압축적인 제도화 과정에서 한국 사회과학의 정체성과 독자적인 한국 사회과학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줄곧 의문이 따랐다. 한국 사회과학의 역사적 전개는 식민지 공간에서 일본에 의한 독일식 사회과학의 중역(重譯)적 소개와 해방 이후 미국 및 유럽 사회과학의 일방통행적 도입으로 규정되었다.² 그러므로 압축적인 제도화 과정에서 놓친 부분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한국 사회과학 전반에 대한 성찰이 시도되었는데, 이러한 성찰은 1970~1980년대 활발히 전개된 ‘한국 사회과학의 토착화’ 논쟁으로 이어졌다. 분과학문들이 제도적으로 확립되는 과정에서 연구자들은 토착화, 전문화 문제 등을 제기하며 한국 사회과학 전반과 분과학문들의 정체성, 전문성 등에 대해 논의하였고 대학 제도의 연구와 교육 현황을 점검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성찰적 작업은 대학의 학과와 전문 학회 설립 같은 형식적인 제도화를 넘어서 사회과학의 실질적인 제도화와 전문화를 추구하는 시도였다고 평가할 만하다.

2 최재석, 「한국의 초기사회학」, 『한국사회학』 9집(1974); 신용하, 「한국사회학의 발전과 방향」,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논문집』 1집(1976); 변형운, 「경제학」, 변형운 외, 『한국의 학과와 학풍』(우석, 1982); 민준기, 「정치학」, 위의 책; 김경동, 「사회학」, 위의 책; 임현진, 「21세기 한국 사회과학 바로 세우기」, 『사회과학연구논총』 창간호(1997) 등

II. 전문 학회와 학회지의 아카데미즘 형성

사회과학 분과학문을 대표하는 전문 학회들의 설립은 한국전쟁이 끝난 후 본격화되어 1960년대에 이르기 전에 대부분 완료되었다. 그러나 설립 이후에도 회원들의 학술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학회지를 정기적으로 발간하기까지는 학회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체로 10~20여 년의 시간이 더 필요했다. 한국경제학회, 한국정치학회, 한국사회학회의 이력에서 중요한 사건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1- 한국경제학회, 한국정치학회, 한국사회학회의 성장³

한국경제학회	한국정치학회	한국사회학회
1952년 11월 부산에서 창립	1953년 10월 부산에서 창립	1956년 10월 서울에서 창립
1953년 10월 『경제학연구』 창간	1959년 4월 『한국정치학회보』 창간	1964년 11월 『한국사회학』 창간
1960년 12월 회원 연구발표회 개최	1960년 11월 회원 연구발표회 개최	1957년 10월 회원 연구발표회 개최
1963년 7월 국제경제학회 가입	1967년 9월 세계정치학회 가입	1966년 9월 국제사회학회 가입
1984년 2월 정기학술대회 개최	1976년 11월 연례연구발표회 개최	1966년 11월 한국사회학대회 개최
1984년 8월 국제한국인경제학자 학술대회 개최	1989년 7월 한국정치세계학술대회 개최	1987년 12월 제5차 동아시아 사회학 국제학술대회 개최
1993년 1월 사단법인으로 법인화	1995년 1월 사단법인으로 법인화	1996년 1월 사단법인으로 법인화

3 자료: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학회 60년 연표』(2012);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 50년사』(2003);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학회 50년사』(2007).

이들 세 학회의 창립과 성장 과정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세 학회 모두 1950년대에 창립하고 1960년대에 단체회원으로 국제 학회에 가입했다. 1970년대에 회원들의 연구발표회를 확대하고 정례화했으며 1980년대에 해외 학자들을 초대하여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하기 시작했다. 1990년대에는 법인화를 통해 순수학술단체에서 사단법인으로 전환하였다.

학회마다 사업의 빈도와 중요성에 있어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로 학회지의 정기적인 발간을 꼽는 점은 같다. 학회지를 통해 회원들의 전문적인 지식 생산과 보급을 돕는 일이야말로 전문 학회의 가장 중요한 의무라고 볼 수 있다. 한국경제학회, 한국정치학회, 한국사회학회는 각각 기관지로서 『경제학연구』,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사회학』을 발간하고 있는데, 이 세 학회지는 사회과학 분과학문을 대표하는 학술지로 오랜 역사를 통해 일정 정도 대표성을 띤다고 볼 수 있다.

한국경제학회는 학회지를 어떠한 어려움에도 발간했다고 자부하는데, 실제로 『경제학연구』는 1953년 창간 이래 한 해도 빠짐없이 발간되었다. 『한국정치학회보』와 『한국사회학』은 초기 몇 년간 다소 불안정했지만, 학회의 기반이 어느 정도 안정된 이후에는 연 1회 이상 꾸준히 발간했다.

표2- 『경제학연구』,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사회학』의 연 발간 횟수

	불안정기	연 1회 발간	연 2회 발간	연 3회 이상
『경제학연구』	없음	1953~1989	1990~1993	1994년 이후
『한국정치학회보』	1959~1970	1971~1985	1986~1992	1993년 이후
『한국사회학』	1964~1975	1976~1983	1984~1992	1993년 이후

한국경제학회는 학회 설립 이듬해인 1953년 10월⁴에 『경제학연구』 창간호를 발간하였는데, 다른 학회들이 학회지를 내기까지 보통 몇 년의 시간이

4 표지에는 '1953년 8월'이라고 쓰여 있지만 실제로는 10월 10일에 발행되었다.

걸린 데 비해 매우 빠른 편이라고 볼 수 있다. 창간호의 편집진은 편집후기에서 “이 학회지가 깊은 곳에 감추고 있는 사명은 우리 한국경제학계의 수준을 세계 각국의 그것에 못지않을 만큼 높은 수준으로 끄집어 올리는 촉진적이고 매개적인 역할을 다하는 데 있다. 이런 의도가 한쪽의 편견도 없이 가장 말쑥하게 우리 경제학계와 일반 독자층에 수납되기를 바란다.” 하고 포부를 드러냈다. 또한 편집후기 말미에는 “전권을 걸쳐 생생하게 역동하는 것은 모든 집필자들이 강의안의 작성과 교과서의 제작에 여념이 없었던 종래의 만네리즘(mannerism)을 조소(嘲笑)하고 또는 그것에서 이탈하면서 되도록 독창적인 업적의 확립에로 몸부림치고 있다는 바로 그 사실이다.” 하며 학회지를 통한 연구논문 발표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였다.

이처럼 초기에 한국경제학회는 경제학자들의 독창적인 업적을 경제학계 뿐만 아니라 일반 독자층에까지 선보이는 곳으로서 학회지를 자리매김하려 했다. 그러나 편집후기에서 지적한 것처럼 1950년대에 교과서와 강의안 제작 등 대학 제도를 체계화하는 일만으로도 정신없이 바빴던 교수들이 독창적인 연구논문을 집필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또한 학회지가 일반 독자층에까지 보급되기를 바라는 것 역시 무리한 의욕임이 금방 드러났다. 『경제학연구』의 창간호와 2집은 출판사가 발행을 맡았지만, 3집(1955)부터 한국경제학회로 발행소가 고정되었다. 또한 초기에는 학회지에 가격표가 붙어서 창간호의 정가가 230환(圓)이었고, 2집은 450환이었다. 1962년 화폐개혁 이후에 발간된 10집은 신권으로 150원이었으며, 이후에도 물가 상승에 따라 계속 가격이 올랐다. 그러나 23집(1975) 이후에는 더 이상 가격표가 붙지 않았다.

20년 넘게 가격표를 붙이긴 했지만, 『경제학연구』는 창간 직후부터 이미 시중 판매용이 아니라 학회에 회비를 내는 회원에게만 배부되는 기관지로 자리 잡고 있었다. 한국경제학회는 학회 창립 10주년(1962)을 맞아 학회와

학회지를 일신하면서 회원 자격과 회비 납부 의무를 규정했다. 회원들이 낸 회비와 정부 기관 등의 재정 지원으로 학회지를 발행하면서 『경제학연구』는 완전하게 ‘비매품’이 되었다. 초기에 학회 임원 몇 명의 기부나 여러 기업의 후원 등으로 재원을 조달해 학회지를 발행한 것과 달리 1970년대에 들어 정부 기관의 출판비 보조금을 받기 시작하면서 안정적인 발간이 가능해졌다. 22집(1974)에서 처음으로 “본 학회지는 재단법인 ‘산학재단’으로부터의 출판비 보조금으로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문구를 학회지 말미에 붙이게 되었고, 이후 산학협동재단, 문교부,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의 부분적인 재정 지원을 지속해서 받을 수 있었다.

한국경제학회가 1953년부터 『경제학연구』를 매해 1권씩 꾸준히 발행하면서 출판계와 거리를 두고 전문 학술지로서 정체성을 강화한 과정을 후발주자인 한국정치학회와 한국사회학회가 거의 그대로 따랐다. 『한국정치학회보』의 창간호는 1959년 4월에 일조각에서 발행되었으며 가격은 800원이었다. 출판사가 발행을 맡긴 했지만, 인쇄비는 모두 학회장(이선근)이 부담했다. 2집은 창간호 발행 후 8년 뒤인 1967년 12월에 발행되었는데, 세로쓰기가 가로쓰기로 바뀌었고 발행소가 출판사가 아니라 한국정치학회가 되었다. 한편 『한국사회학』은 1964년 11월에 발간한 창간호부터 발행소를 한국사회학회로 표기했으며 비매품이라고 명기하였다.

1970년대에 이르러서야 정기적인 발행이 가능해진 『한국정치학회보』와 『한국사회학』이 초기부터 다수의 회원이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그에 대해 토론을 나누는 전문 학술지의 성격을 갖춘 것과 달리 1950년대부터 꾸준히 발행된 『경제학연구』의 경우 학회 설립과 성장을 주도했던 소수의 선구자, 공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국정치학회보』는 학자 개인에게 헌정된 경우가 없으며 『한국사회학』은 1966년에 발간된 2집이 같은 해 4월에 타계한 이상백 교수 추념호로서 「추도문」과 「문헌록」을

수록하였지만 그 외에는 화갑기념, 고회기념 특집호 등을 발간하지 않았다.⁵ 그러나 『경제학연구』는 22집(1974) 최호진 교수 화갑기념, 23집(1975) 김준보 교수 화갑기념, 25집(1977) 고승제 박사 화갑기념, 27집(1979) 김삼수 교수 화갑기념, 30집(1982) 신태환 박사 고회기념, 32집(1985) 최호진 박사 고회기념, 35집(1988) 고승제, 조기준 교수 고회기념 특집호로 발간되었다. 이와 같은 특집호의 발간은 초기 학회지의 독특한 문화로서 전문 학술지 체계가 확립된 1990년대 이후에는 지속되지 않았다.

한국사회학회는 전문 학술지의 특징을 다섯 가지로 정리한다. 첫째, 독창적이고 새로운 연구를 발표하거나 기존 연구에 대한 비판적 탐구를 소개하기 위해 간행된다. 둘째, 게재 과정에서 동료들의 평가와 리뷰를 거친다. 이 점은 전문 학술지가 일반 잡지와 가장 근본적인 차원에서 구별되는 요소이다. 셋째, 전문 학술지의 독자는 전문 연구자들이다. 따라서 전문 학술지에 실을 연구논문을 작성하는 데 대중적 인기나 흥미는 전혀 고려 대상이 되지 않으며 오로지 소수 전문가의 높은 평가를 기대한다. 넷째, 간행이 정기적이며 대체로 연 4회 계간 발행 형식이 전형적이다. 다섯째, 비영리적 간행물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가가 있는 상업출판물이 아니라 비매품이며 기관에 가입된 회원에게만 배포되는 기관지인 경우가 많다.⁶ 전문 학술지의 이러한 특징 중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 즉 정기적인 간행과 비매품이라는 특징 등은 1970년대에 이미 확립되었다. 그러나 일반 잡지의 글과 차별되는 연구논문의 형식, 전문 학술지 특유의 게재 절차 등이 학회지에 완전하게 정착된 것은 1990년대에 이르러서다.

5 『한국사회학』 2집(1966)에는 미국 사회학회의 33대 회장이었던 룬드버그(G. A. Lundberg) 교수를 추도하는 문헌록을 실기도 했다. 11집(1977)에서 양희수 교수의 회갑을 기념하고 13집(1979)에서 타계한 이해영 교수를 추념하긴 했지만 따로 특집을 편성하지는 않았다.

6 한국사회학회, 앞의 책, 78~79쪽.

전문 학회들은 대중과의 소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학회에 소속된 전문가끼리의 학술교류가 주목적이며 학회지의 연구논문 역시 급박한 현실 문제나 유행과 거리를 둔다. 즉 전문 학회와 학회지는 저널리즘과 차별되는 아카데미즘을 추구한다. 아카데미즘을 추구하면서 전문 학술지의 연구논문과 일반 잡지의 글을 차별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전혀 없지는 않았지만⁷, 1980년대 이후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을 막론하고 대부분 학자가 《월간조선》, 《월간중앙》, 《신동아》 등 일반 잡지의 청탁을 받아 실는 글과 전문 학술지에 투고하는 연구논문을 구별하면서 학술 활동에서 저널리즘을 제거하고 아카데미즘을 확고하게 구현하게 되었다.

전문 학술지에 실리는 연구논문은 일반 잡지에 실리는 글들과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연구논문은 연구자의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발견, 논증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는데, 이와 같은 내용의 기본 요건 외에도 기존 연구에 대한 검토 및 이론적 배경, 참고문헌(reference, bibliography)과 같이 형식에서도 지켜야 할 규범이 있다. 연구논문의 독특한 형식은 일반 잡지에 실리는 글과 연구논문을 한눈에 구별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런데 초창기 학회지에 실린 연구논문들은 형식적인 면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었으며 일반 잡지에 실리는 글과 큰 차이가 없었다.

두드러진 예로 참고문헌을 들 수 있는데, 세 학회지의 연구논문 뒤에 참고문헌이 첨부된 것은 창간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였다. 『경제학연구』

7 한 예로, 1982년 한국사회학회 추계 사회학대회에서 강신표는 「인류학적으로 본 한국사회학의 오늘: 김경동과 한완상의 사회학」이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월간조선》 1982년 4월호에 실린 김경동의 글(「한국의 학파와 학풍: 사회학」)을 비판했는데, 몇몇 학자들이 전문 학술지가 아닌 일반 잡지에 쓴 글까지 학회에서 논의할 이유가 없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강신표는 “마치 신문·잡지의 글은 저 아래이고 자기들만이 아주 대단한 학문을 하는 것처럼 높여 생각하고 구별하려는 듯” 보인다고 안타까워했다. 강신표, 『한국사회학의 반성』(현암사, 1984), 20쪽.

의 경우 창간 10주년 기념호인 10집(1962)에 실린 박종한의 영어 논문(『The Evolution of the Management Class』)에 처음으로 참고문헌이 붙었지만, 예외적이었다. 1979년에 발간된 27집을 기점으로 참고문헌이 일반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25집에서는 연구논문 11편 중 3편, 26집에서는 5편 중 2편에만 참고문헌이 붙은 데 반해, 27집은 6편 중 5편, 28집은 6편 중 4편이 참고문헌 목록을 작성한 것이다. 즉 1953년에 창간된 『경제학연구』에서 연구논문의 형식이 체계화된 것은 1980년 무렵의 일이며, 연구논문을 투고하는 데 필요한 ‘원고 작성 및 투고 요령’이 규정된 것은 1990년대에 들어서다. 『경제학연구』 39집 1호(1991)에 「원고 작성 요령」이 처음으로 제시되었고 41집 1호(1993)부터 「원고 작성 및 투고 요령」이 계속 실렸다.

『한국사회학』 역시 연구논문의 형식에 일관된 기준이 없었다. 인용한 문헌을 각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고 참고문헌을 따로 뒤에 붙인 경우는 드물었다. 오탈자도 적지 않았으며 필자의 개성에 따라 각 장(章)을 표시할 때 한자(一, 二, 三), 로마 숫자(I, II, III), 아라비아 숫자(1, 2, 3) 등을 자유롭게 활용했다. 편집위원회가 존재하긴 했지만 특별한 기준 없이 필자의 작성 방식을 거의 그대로 수용했기 때문이다. 『한국사회학』은 17집(1983)에 이르러 비로소 모든 논문에 참고문헌이 붙게 되었으며 학회지 끝에 ‘원고제출 및 집필요강’이 명확히 제시되었다.

『한국정치학회보』는 가장 늦게 연구논문의 형식을 제약하기 시작했다. 연 1회 학회지를 발간할 때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가 1986년에 연 2회 발간하기로 하면서 처음으로 ‘각주 작성 요령’을 학회지 뒤에 첨부했다. 『한국정치학회보』 20집 1호(1986)에서 표제를 한글로 바꾸고 학회지에 제출되는 논문의 심사 과정과 각주 작성 방법을 정식화했다. 그전까지 편집위원회가 청탁하거나 연구발표회에서 발표된 논문을 신던 방식에서 벗어나 제출된 논문을 두 명이 검토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

도입된 것이다. 그러나 이때에도 참고문헌 없이 원고 내부에서 각주로 처리하는 방식을 고수했는데, 참고문헌 작성을 강제하게 된 것은 「한국정치학회보 원고 제출 및 작성 요강」이 처음 실린 27집 1호(1993)부터다.

전문 학술지에 실리는 연구논문들은 일반 독자들이 이해하기 힘든 전문 용어를 풀이 없이 그대로 사용하고 초록과 참고문헌이 붙는 형식적인 특징 외에도 게재 절차에서 일반 잡지에 실리는 글과 큰 차이를 보인다. 연구논문은 일반인이 아니라 해당 분과학문의 전문가들만을 독자로 상정한다. 따라서 학술지에 논문을 실기 위해서는 전문가 동료들의 평가(peer review)를 거칠 수밖에 없다. 일반 잡지의 경우 편집위원회가 기획에 맞춰 글을 청탁하거나 기고된 글 중에 게재할 글을 고르지만, 전문 학술지에 실리는 연구논문은 해당 분야를 연구하는 전문가 동료가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그런데 이처럼 연구 분야별로 동료 평가를 거치려면 학계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대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창간 후 20~30여 년 동안 학회지들은 일반 잡지와 마찬가지로 편집위원회에 원고와 관련된 일들을 도맡다가 1990년대 이후에 동료 평가에 기반을 둔 논문심사제도를 확립할 수 있었다. 세 학회지에서 '원고 작성 및 투고 요령'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연구논문의 형식을 제약하기 시작한 시기와 논문심사제도를 운용하기 시작한 시기는 거의 일치한다.

Ⅲ. 대학에서 분과학문별 학과의 설립

1980년대는 대학에서의 지식 생산과 유통이 과거 어느 때보다 양적으로 확대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1960~1970년대가 대학 제도의 정비기였다면

1980년대는 본격적인 성장기였다. 1980년대에 대학 제도가 확대, 개방되면서 대학 설립이 늘고 대학생 수가 급증했으며 학과 수 역시 크게 늘었다. 해방 후 대학 제도의 변화를 주도한 것은 정부였는데, 1970년대에 양적인 팽창을 억누르는 규제 분위기에서 실험대학 운영, 대학생 정원령과 학위등록제 실시, 지방대학 확충 등 일련의 개혁 조치 등이 단행되었다면 1980년대에는 교육 정상화 조치와 졸업정원제 등으로 인하여 갑작스러운 양적 팽창이 이루어진 것이다.⁸

1970년대만 해도 대학 진학은 소수의 엘리트에게만 가능한 일이었지만 1970년대 후반부터 경제 발전으로 대졸 인력 수요가 크게 늘자 경제 단체들이 정부에 대학 정원을 확대해 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다. 1979년 경제기획원과 문교부가 협의하여 일반대학⁹과 전문대학의 정원을 49,450명 증원한 것이 대학 제도 확대의 시발점이 되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일반대학의 양적 팽창이 시작된 것은 1980년에 전두환 정권이 발표한 「7·30 교육개혁안」 이후라고 볼 수 있다. 1979년 10·26 사건으로 박정희 정권이 막을 내린 후 12·12 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신군부는 대학 제도의 확대와 개방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했다.

정부는 일반대학의 입학정원을 크게 늘리면서 인력의 미래 수요를 예측하여 계열별로 배분을 달리했다. 1968년에 가장 학생 수가 많은 분야는 사회 계열(20.7%)이었고¹⁰, 뒤이어 공학 계열(20.4%), 자연 계열(10.9%) 순이

8 신현석, 『한국의 고등교육 개혁정책』(학지사, 2005), 13~14쪽.

9 본고에서는 혼란을 피하고자 고등교육을 시행하는 다양한 형태의 학교들을 포괄하여 '대학'이라 부르며, 직업 교육이 아니라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4년제 이상의 대학을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등과 구별하여 가리킬 때는 '일반대학'이라는 용어를 활용하였다.

10 사회 계열의 주요 학과로는 1)법학, 2)정치외교학, 3)행정학, 4)경영학, 5)경제학, 6)회계학, 7)사회학, 8)심리학, 9)지역학, 10)가정학, 11)지역개발학, 12)관광학이 포함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대학의 성장유형과 학과분화에 관한 연구』

었다. 1970년대에는 제3공화국의 이과 우선 정책에 따라 문과보다 이과의 정원을 꾸준히 늘렸기에 1978년에 공학 계열(23.5%)이 최대 규모였고, 이어서 사회 계열(18.0%), 사범 계열(16.7%), 자연 계열(9.1%) 순이 되었다. 1968년에 이미 문과 대 이과의 비율이 45.7% 대 54.3%로 문과보다 이과가 많았는데, 1978년에는 44% 대 56%로 차이가 더 벌어졌다.¹¹

이처럼 1970년대까지는 문과보다 이과를 우선시하는 정부의 교육정책 때문에 대학에서 공학 계열의 입학정원이 가장 많았으나, 1980년대에는 사회 계열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일반대학 입학정원을 계열별로 살펴보면, 1980년 전후로 사회 계열의 입학정원이 다른 계열보다 많이 늘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회 계열은 1977년에 전체 입학정원의 18.58%에서 1983년에 27.83%로 비중이 커졌지만, 같은 기간에 공학 계열은 21.23%에서 17.88%로 감소했다. 또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던 인문 계열과 자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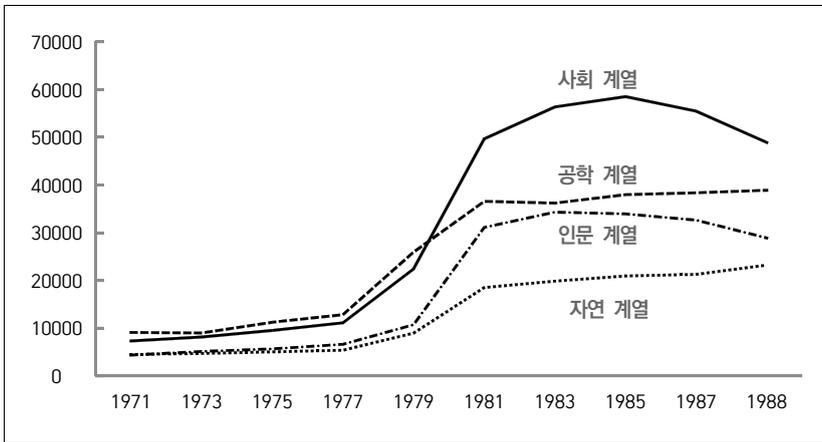


그림1-1971~1988년 계열별 입학정원

(1990), 162~163쪽.

11 우마코시 토오루(저), 한용진(역), 『한국 근대대학의 성립과 전개』(교육과학사, 2001), 266쪽.

계열의 차이도 크게 벌어졌다.¹²

사회 계열에서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이 대학의 학과로 정착한 사례만 따로 살펴보면, 1980년 이후 경제학과, 정치외교학과¹³, 사회학과가 많이 늘어났다.¹⁴ 1980년에 경제학과는 58개, 정치외교학과는 26개에 불과했지만 2000년에는 150개, 64개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사회학과는 같은 기간에 10개에서 42개로 세 배 이상 증가했다. 다만 학과별로 증가한 시기에 있어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다. 경제학과는 1970년대 중반에도 증가세가 뚜렷했으며, 학부제가 도입된 1995년 이후에도 급격히 증가했다. 정치외교학과는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고, 사회학과는 절반 이상이 1980년대에 설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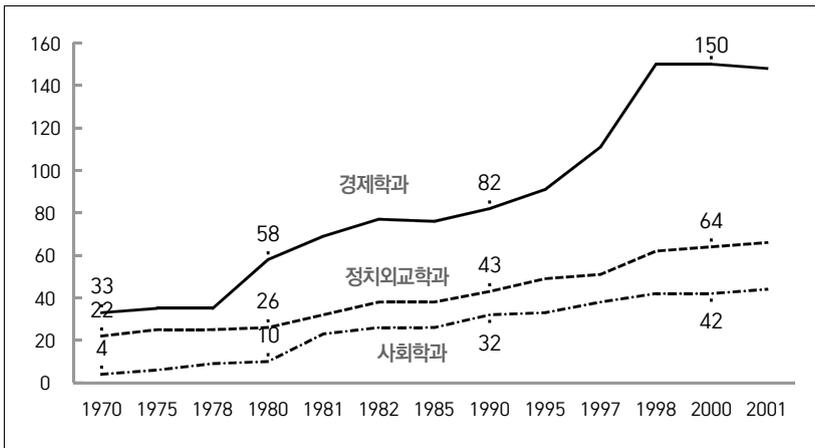


그림2- 일반대학의 경제학과, 정치외교학과, 사회학과 수

- 12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앞의 책, 136쪽.
- 13 정치학은 보통 정치외교학과에서 다룬다. 설립 당시에는 정치학과였던 경우도 대부분 정치외교학과로 명칭을 변경했다. 서울대 정치학과가 예외로 남아 있었는데, 2010년에 외교학과와 통합하여 정치외교학부로 바뀌었다.
- 14 분과학문별 학과는 명칭을 정확하게 규정한 경우로 한정했다. 즉 경제학과, 정치학과, 정치외교학과, 사회학과만 센 것이며, 지역경제학과, 국제경제학과, 정책학과, 정보사회학과, 도시사회학과 등은 제외했다. 1995년 이후에는 학부제 시행에 따라 경제학부, 경제학 전공, 정치외교학부 등도 통계에 포함되었다.

되었다.

1996년에 ‘대학설립준칙주의’가 도입되어 대학 설립에 대한 국가의 규제가 완화되었는데, 이후 계속 늘어난 대학에 경제학과는 어김없이 들어선 반면, 정치외교학과나 사회학과는 거의 설립되지 않았다. 2000년대를 기준으로 일반대학 중에 경제학과, 정치외교학과, 사회학과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 대학은 30개 정도인데¹⁵, 세 학과의 설립 시기를 비교하기 위해 30개 대학만 따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순서를 정리할 수 있다.¹⁶

표3-30개 대학의 경제학과, 정치외교학과, 사회학과 설립 시기¹⁷

경제학		정치외교학		사회학	
중앙대	1945	고려대	1946	서울대	1946
고려대	1946	국민대	1946	경북대	1954
국민대	1946	서울대	1946	이화여대	1958
서울대	1946	연세대	1946	고려대	1963
연세대	1946	동국대	1947	연세대	1972
동국대	1947	동아대	1947	충남대	1975
동아대	1947	영남대	1947	부산대	1976
영남대	1947	부산대	1948	성균관대	1976
성균관대	1948	성균관대	1948	전남대	1977
부산대	1949	중앙대	1949	전북대	1977
경북대	1951	이화여대	1950	제주대	1978
전남대	1951	경북대	1951	동국대	1979

15 2010년 이후 대학 구조조정으로 학과·학부 통폐합이 활발했기에 2000년대를 기준으로 비교하였다.

16 학부제 이후 전공으로 변경되었어도 과거에 학과로 유지된 이력이 있으면 포함했다. 예를 들어 동국대학교는 기존의 학과들이 학부로 통합된 경우이므로 포함했으나, 성공회대학교는 사회과학부의 정치학, 사회학, 경제학 전공이 과거에 개별 학과로 설립된 적이 없으므로 제외했다. 설립 시기는 각 학과의 연혁을 기준으로 삼았다. 예컨대, 중앙대학교 경제학과는 1945년 10월에 신설된 중앙여자전문학교 경제학과를 학과의 시작으로 보며 1995년에 개과 50주년 기념행사를 했다.

17 각 대학, 각 학과 홈페이지.

경제학		정치외교학		사회학	
전북대	1952	전남대	1952	대구가톨릭대	1980
청주대	1953	전북대	1953	영남대	1980
송실대	1954	경희대	1955	강원대	1981
경희대	1955	한양대	1959	계명대	1981
한양대	1959	서강대	1973	동아대	1981
서강대	1960	경남대	1976	서강대	1981
경남대	1973	충북대	1981	청주대	1981
계명대	1975	송실대	1982	충북대	1981
충남대	1975	대구가톨릭대	1983	한양대	1981
충북대	1978	강원대	1984	경남대	1982
강원대	1979	청주대	1985	경상대	1982
경상대	1979	충남대	1985	경희대	1988
아주대	1981	한림대	1988	한림대	1988
울산대	1981	아주대	1990	국민대	1989
이화여대	1981	울산대	1990	아주대	1989
대구가톨릭대	1982	경상대	1993	울산대	1994
제주대	1983	제주대	1995	송실대	1998
한림대	1984	계명대	1998	중앙대	1998

30개 대학에서 경제학과와 정치외교학과는 1960년 이전에 60% 가까이 이미 설립되었다. 경제학과 정치학은 식민지 시기 전문학교의 이재학과(理財學科)나 상학과(商學科), 정법과(政法科) 등이 토대가 되어 해방 후 전문학교들이 일반대학으로 변경되는 것과 동시에 학과로 출범한 경우가 적지 않다. 반면에 사회학은 신생 학문의 면모를 보인다. 1960년 이전에 설립된 사회학과는 10%에 지나지 않으며 반대로 1980년 이후 설립된 학과가 60%다.

30개 대학에서 1960년 이전과 1980년 이후에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의 학과 설립이 많은 편이며, 정부의 통제가 강했던 1960~1970년대에는 설립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경제학은 1980년 이전에 설립된 학과의 수가 이미 80%에 달해 다른 학문에 비해 제도화가 일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치학은

경제학과 마찬가지로 식민지 시기 전문학교의 유산을 토대로 빠르게 제도화에 돌입했지만, 1960~1970년대에 암흑기를 거쳤다. 한편 사회학은 다른 두 학문보다 뒤늦게 대학 제도에 정착하기 시작했으며 1980년 전후로 급격한 성장세를 보였다. 다른 두 학과와 비교하면, 1980년대는 '사회학의 시대'였다고 얘기할 만하다.

전문 지식의 소비자로서 대학생이 많이 늘어나자 사회과학계의 지식 생산과 유통 역시 활기를 띠게 되었다. 사회과학계는 해방 후 꾸준히 역량을 키워오긴 했지만 1980년대에 그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성장을 이루었다. 대학 제도의 확대에 이어 교수 한 사람당 학생 수를 감축하고 대학의 연구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등 후속 조치가 뒤따르자 해외 유학을 하지 않고 국내에서 대학원을 졸업한 연구자들도 대학 제도 내에서 비교적 수월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되었고 전문 학회의 회원 수와 학회지를 통해 발표하는 연구논문의 수도 늘어났다.

IV. 한국 사회과학의 정체성과 전문성

1. 사회과학의 토착화 논의

1970년대는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과 같은 개별 분과학문을 넘어서 사회과학이라는 통합적 지식체계가 제도적으로 구성된 시기였다. 통합적 사회과학을 지향하는 경향은 사회학 쪽에서 가장 두드러졌다. 사회학이 애초에 통합적인 학문의 성격을 지니기도 하지만, 1980년대 이전에는 다른 사회과학 분과학문들에 비해 제도적 기반이 약했던 점도 이러한 경향과 무관하지 않다. 한국사회학회 초대 회장이었던 이상백은 『사상계』 1959년

11월호에 「사회과학 통합을 위한 시론」을 발표하여 분과학문과 학과별로 학문을 경계 짓는 성향을 비판하고 공동 연구, 종합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한국사회학회회는 1972년 춘계 사회학대회를 ‘한국 사회과학의 반성’이라는 주제로 개최하고 ‘경제학과 사회학’, ‘정치학과 사회학’, ‘역사학과 사회학’의 3개 분과로 나누어 발표와 토론회를 열었다. 이 토론회는 분과학문의 경계를 넘어 한국 사회과학에 대해 집단적으로 성찰한 최초의 작업이라고 할 만하다.¹⁸

한국사회학회회는 1973년 춘계 사회학대회에서 ‘사회과학 이론의 보편성과 특수성’이라는 주제로 심리학,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분과로 나누어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사회학의 입장에서 사회과학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을 이어나갔다.¹⁹ 1979년에는 한국사회과학협회의회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공동으로 ‘한국 사회과학의 연구방법의 토착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는데, 이 세미나 역시 사회학자들이 주축을 이루었다. 행정·정치학 분야, 경제·경영학 분야, 사회·인류학 분야, 교육·심리학 분야로 나누어 주제 발표를 하고 한 명(권태환)이 회의 전체를 정리했다.

1970년대에 한국의 사회과학계에서 사회과학의 토착화나 한국 사회과학의 정립 문제를 활발히 제기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다룬 주제는 보편성과 특수성의 갈등이었다. 그런데 보편성과 특수성의 갈등이 모든 분과학문에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았다. 1979년의 세미나 보고서는 정치·행정·사회·문화·교육 분야에서는 토착화에 대한 논의가 실질적인 의미가 있지만, 심리·경제에서는 그다지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지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다.²⁰ 실제로 1970년대에 『경제학연구』에서 이 주제가 깊이 있게 다뤄진

18 토론회의 내용은 『한국사회학』 7집(1972)에 실린 김성국·임현진의 「한국사회와 사회과학」에 소개되어 있다.

19 이때 발표된 논문들은 『한국사회학』 8집(1973)에 실려 있다.

20 한국사회과학연구협의회·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한국사회과학의 토착화』(유네

적은 없는 반면, 『한국정치학회보』와 『한국사회학』에서는 여러 차례 특집으로 편성하여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경제학계가 대체로 서구경제학의 보편성에 확신하고 있었던 것과 달리 정치학계와 사회학계는 한국 사회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학문의 보편성과 특수성 문제는 당시 사회 상황과도 깊이 연관된다. 1972~1979년은 이른바 유신 체제였으며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을 계기로 남북대화가 시작된 시기이기도 했다. 민족주의적 분위기가 고조된 가운데 학계에서 한국학 연구 열풍이 일었고, 사회과학의 토착화나 한국 사회과학의 정립 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었다. 그런데 유신 말기에 유독 사회과학에 대한 성찰적 작업이 활발했던 데에는 엄혹한 정치 환경을 직접적인 연구 대상으로 삼는 것을 피하고 학계 내부의 정비와 추상적인 논의에 집중할 면도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대통령이 피살되어 유신 체제가 막을 내리고 난 후에도 사회과학 전문 학회들이 한국 사회의 현실을 직접적인 연구 대상으로 삼기는 쉽지 않았다. 1980년 5월에 광주민주화운동이 벌어지고 1981년에 제5공화국이 출범하는 등 정치적 격변기가 이어지는 동안 사회과학 전문 학회들의 연구 경향은 더욱더 특수성보다는 보편성을 지향하는 쪽으로 나아갔다. 한국 사회의 특수한 현실을 연구 대상으로 삼기 어려운 정치적 상황에서 학자들은 과학과 이데올로기의 대립 역시 보편성과 특수성의 갈등과 같은 차원에서 논의했다. 사회과학자는 이데올로기적 편향을 삼가고 과학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인식이 학계 내에 팽배했으며 이러한 분위기에 저항하는 학자는 소수에 그쳤다.

이러한 상황에서 토착화 논의는 대부분 연구 대상의 특수성이 아니라

스코한국위원회, 1979), 9쪽.

연구 방법의 보편성을 추구하는 쪽으로 전개되었다. 예컨대 “사회과학 방법론의 보편성이 전제되지 않은 특수화에의 노력으로서의 토착화는 의미가 없다. 그 절차가 보편적인 것에서 특수적인 것으로 가든, 그 반대의 경우이든 간에, 사회과학 이론 내지 방법론의 보편성 추구는 토착화 문제의 근간을 이룬다.”고 주장했다. 또한 “토착화가 소비니즘이나 자민족중심주의에서 나온 것이어서는 안 되고 거기에 ‘정치적’인 요소를 가미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는 경고도 빠지지 않았다.²¹ 즉 특수성을 추구하는 것은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매몰될 위험이 따르므로 과학성을 강화하여 보편성을 추구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과학 전반이 아닌, 개별 분과학문의 토착화 논의에서는 토착화를 학문의 사회적 쓸모에 대한 문제로 인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즉 단순히 이론이 서구의 것인가, 한국의 것인가 혹은 방법론이 누구의 것인가가 문제가 아니라 학문이 우리 자신의 사회적 상황을 이해하고 진단하는 데 유용한가 아닌가를 고민한 것이다. ‘한국’이라는 말이 학문에 붙었을 때, 즉 ‘한국경제학’, ‘한국정치학’, ‘한국사회학’ 같은 말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일부 학자들은 ‘한국 사회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한 학문’이라는 답을 내어놓았다. 이들은 과학성을 추구한다는 명목으로 서구의 이론과 방법론을 수입하는 데 만족하는 것은 상아탑에 갇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장했다.

한국정치학회는 『한국정치학회보』 2집(1967)에서 이미 정치학과 행정학 연구현황을 살피는 연구논문을 4편(구범모의 「비교정치학 20년의 반성」, 이정식의 「한국정치 및 정치과정 연구현황」, 손제석의 「국제정치학의 연구 및 대학교육경향」, 박동서의 「한국행정학의 현황과 역할」) 실은 바 있는데,

21 위의 책, 9쪽.

이 논문들은 주로 해방 후 정치학계의 연구 업적과 현황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로부터 10년 뒤인 1977년부터 『한국정치학회보』 11, 12, 13집에 연속으로 한국정치학에 대한 성찰과 반성을 특집으로 편성했다. 11집(1977)은 ‘한국정치발전과 정치학’, 12집(1978)은 ‘건국 30년의 한국정치학: 정치학교육의 문제점’, 13집(1979)은 ‘한국정치학의 정립문제’가 주제였으며, 이들 중에서도 특히 13집은 ‘한국정치학’에 대한 고민을 가장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다.

『한국정치학회보』 2~4집에서 한국정치사나 한국정치사상을 통해 한국정치학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했던 것과 달리 10년 뒤인 13집에 특집으로 편성된 논문 11편은 대부분 서구정치학 이론을 한국에 비판적으로 적용하는 문제에 집중한다. 특히 서두에 실린 문승익의 「한국정치학의 정립문제: 정치이론의 경우」는 이후 한국정치학의 토착화 논의에서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논문이다. 문승익은 정치학의 보편성은 오로지 정치현상이 갖는 제반 속성이 동질하다는 의미에 국한되며, 정치현상의 제반 속성이 구현되는 상황이나 정치학자가 처한 상황은 국가별로 동질하지 않다고 전제한다. 따라서 한국정치학은 ‘자아준거성(自我準據性)’이라는 특징을 갖는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자아준거성이 단순히 서구의 정치학과 구별되는 ‘독자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문승익은 한국정치학의 정립문제가 결국 ‘정치학은 무엇을 하는 학문인가?’라는 질문과 결부된다고 지적한다. 정치학이 ‘정치현상의 기술, 설명, 예측을 목적으로 하는 학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치생활에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의 해결을 추구하는 학문’이라고 규정할 때, 학문의 독자성을 넘어 ‘적실성(relevance)’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서구의 정치학, 특히 미국정치학에 종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현상과 문제를 철저히 인식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결과라고 본다.

한편 사회학은 '사회학의 사회학'이라는 분야가 따로 있을 정도로 다른 분과학문에 비해 성찰성이 유독 강한 편이다. 학회지 창간 전인 1963년 11월에 한국사회학회가 제1회 학술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선택한 주제도 '한국사회학의 연구와 문제점'이었다. 최재석은 『한국사회학』 9집(1974)에 「한국의 초기사회학: 구한말~해방」을, 10집(1976)에 「해방 30년의 한국사회학」을, 13집(1979)에 「1980년대의 한국사회학의 발전을 위하여」를 발표하면서 한국사회학에 대한 초기의 성찰 작업을 주도했다. 17집(1983)에는 박노영의 「아카데미사회학의 인식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주체적인 사회학을 지향하여」가 실렸으며, 이후 한국사회학에 대한 성찰 작업은 연구자 개인에서 학회 차원으로 확대되어 18집 여름호(1984)에 '한국사회학 40년(1)', 19집 여름호(1985)에 '한국사회학 40년(2)', 20집 여름호(1986)에 '사회학의 새로운 이론적 조류' 특집이 편성되었다. 또한 1987년부터 한국사회학회 회장 취임 강연이 정례화되어 매년 강연내용이 학회지에 실리기 시작했는데, 취임 강연마다 한국사회학에 대한 반성과 발전 방향이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졌다. 특히 28집 봄호(1994)에 실린 신용하의 「독창적 한국사회학」의 발전을 위한 제언은 '사회학의 위기'라는 말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시점에서 한국사회학의 문제와 과제를 일목요연하게 제시하여 주목받았다.

한국사회학에 대한 논의는 주로 학문의 당파성을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견해 차이로 귀결되었다. 서구 이론의 무비판적 수용을 경계하고 민족, 민중지향적 학문을 지향하는 입장에서는 학문의 당파성을 피할 수 없다는 점과 서구 이론이 지배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효과를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을 전제로 삼았다. 그러나 이에 반대하는 입장은 무조건적인 탈중속론의 위험을 지적했다. 한국사회학은 여전히 세계 수준에 미치

지 못하므로 서구 학문의 흐름과 성과를 외면할 때 학문이 낙후할 뿐이라는 것이다. 또한 어떤 학문이 민족, 민중에게 도움이 되는가는 종속적이나 탈종속적이나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사람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지와 같은 실용적인 차원에서 판단할 문제라는 것이 학문을 진보적, 보수적으로 가르는데 반대하는 학자들의 입장이었다.

한국정치학과 한국사회학에 대한 논의에서 드러나는 공통점은 어느 순간 논의가 정치학이나 사회학을 넘어서 자연스럽게 '사회과학'으로 넓어진다는 점이다. 문승익은 「한국정치학의 정립문제」 말미에서 "사회과학자들이 대체로 현존질서에 관계되는 '근란한' 문제를 다루기 꺼려한다는 사실, 또 '가치중립성'의 이름 밑에 이루어지는 학문적 소산이 빈번히 현존질서에 봉사하고 현존질서 내의 권력층에 봉사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사회과학의 적실성과 사회적 유용성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또한 윤근식 역시 『한국정치학회보』 13집에 실린 「사회비판적인 정치분석과 한국정치학」에서 정치학의 과제를 얘기하면서 '사회과학자' 전체의 과제와 동일시한다.

이러한 경향은 경제학자들과 뚜렷이 대비된다. 한국의 경제학계는 "기본적으로 사회과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제(諸)과학들이 있을 뿐"이라는 슈페터(J. Schumpeter)의 주장을 받아들여 통합적인 사회과학에 대한 성찰을 피하지 않았으며 한국의 경제학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하기 위한 전략에만 몰두했다. 『경제학연구』에서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경제학'에 대한 특집을 따로 마련하거나 성찰적 작업을 수행한 적은 거의 없다. 예외가 있다면 『경제학연구』 34집(1986)의 부록²²에 수록된 이현재의 「한국경제와 한국경제학」 정도를 꼽을 수 있을 뿐인데, 이 글은 연구논문이

22 1986년 8월 18~19일에 열린 '제2차 국제한국인경제학자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들이 『경제학연구』 34집의 '별집'으로 따로 묶여서 발간되었다.

아니라 강연을 수록한 글이다. 이현재는 경제학 일반 동향과 다른 독보적인 한국경제학이나 한국적 경제학의 정립에 대해서 회의적이었다.

1970~1980년대에 활발했던 ‘한국사회과학’ 혹은 한국적 사회과학과 관련된 논쟁에 대해 한국경제학회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사회과학 토착화 논쟁이 한창이던 때에 경제학 쪽의 주요 논의들은 한국경제연구원이 1983년에 발간한 『한국경제학의 모색』이라는 보고서에 집결되어 있다. 이 보고서에 실린 글들은 강연내용 요약본과 논문 몇 편을 재수록한 경우를 제외하면 《매일경제신문》, 《한국경제신문》, 《월간조선》, 《월간중앙》 등 일간지와 잡지에 실린 시평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경제학연구』 같은 전문 학술지에서 진지하게 한국경제학의 특수성을 제기한 경우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한국경제학을 모색하는 고민은 주로 경제학자들이 대중매체에 기고한 글에서 드러났다. 보고서에 실린 글들 역시 서구경제학의 보편성을 인정하고 ‘취할 것이 있으면 최대한 취하는 것이 경제적’이라는 입장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경제학계 입장에서 한국경제학과 서구의 경제학은 전혀 차이가 없었다. 역사와 환경이 다른 서구에서 등장한 경제학을 한국에 그대로 적용할 때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대부분 인식하고 있지만 ‘조심스럽게 수용해야 한다.’는 주의에 그쳤다. 또한 서구경제학의 일반 동향에서 벗어나 특수성을 추구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강한 반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현대경제학과 구별되는 한국경제학의 특수성에 관한 요구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경제학계의 반성은 학문 자체보다 학계의 분위기에 대한 반성인 경우가 많았다. 한 예로 신태환은 1983년 한국경제학회 창립 30주년 기념식에서 ‘한국경제학 50년의 회고’라는 제목으로 강연하면서 종파성이 부족하여 활기가 없는 학계의 분위기, 같은 대학 졸업생만 고용하는 폐쇄성을 한국 경제학계의 문제로 지적했다.²³

2. 대학 교육의 전문성과 대중성 문제

저널리즘과 동떨어진 아카데미즘을 추구하는 상황에서 전문 학회가 생각하는 학문 대중화의 유일한 경로는 대학 교육뿐이었다. 따라서 1970~1980년대에 정치학과 사회학계는 대학 교육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수행할지에 대해서 고민했는데, 전문적 지식의 생산에서 서구 이론과 방법론의 보편성 쪽으로 성향이 기울어진 것이 대학 교육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었다. 학계 차원에서 자신 있게 '한국정치학'이나 '한국사회학'이라고 정의할 만한 연구 업적이 쌓이지 않았기 때문에 교양이나 전공 진입 단계에서는 여전히 서구의 교과서, 개론서에 의존했고 학부 전공과 대학원에서조차 최신의 서구 이론과 방법론을 이해시키는 방식으로 교육 과정이 꾸려진 것이다.

한국정치학회의 경우 『한국정치학회보』 2집(1967)에 실린 손제석의 「국제정치학의 연구 및 대학교육경향」에서 이미 대학 교육을 점검하기 시작했다. 1974년에 한국정치학회는 정치학 교과과목의 표준화 작업을 위해 학회 내에 교과과목위원회를 설치했다. 『한국정치학회보』 12집(1978)에서는 '정치학교육의 문제점' 특집으로 김규수의 「정치외교학과 학생에 대한 능력평가」, 문승익의 「정외과 학생들의 태도분석」, 이종범의 「정외과 학생들의 이미지 분석」, 윤근식의 「정외과 학생들의 정치학교육에 관한 자체평가」를 실었는데, 이 연구논문들은 한국정치학 교육 평가를 위해 실시된 질문지 조사 결과에 근거를 두었다.

손제석은 초기 국제정치학 교육 현황을 파악하며 외국 이론의 도입에 있어 무책임한 이중번역과 외국도서를 표절하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23 신태환, 「한국경제학 50년의 회고」, 김진현(편), 『한국경제학의 모색』(한국경제연구원, 1983), 20쪽.

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 및 교육 경향에 대해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검토할 것을 제안했는데, 『한국정치학회보』 12집에 실린 논문들은 이러한 제안을 현실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교수의 처지에서 교육의 문제점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수혜자인 대학생들의 관점에서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한 점도 특기할 만하다. 특히 윤근식의 「정외과 학생들의 정치학교육에 관한 자체평가」는 학생들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교육’을 밝히고자 하는 점에서 정외과 학생들의 기본적인 성향이나 정외과 학생에 대해 기업체들이 갖는 이미지 등을 파악하는 다른 논문들보다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질문지 조사에 16개 대학 487명의 정외과 대학생들이 답한 내용을 보면, 대학에서 정치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크게 드러나는 특징은 욕구와 행동의 괴리라고 볼 수 있다. 교육 내용에 있어서 ‘학문적 연구를 위한 교육’(32.78%), ‘사상가 육성을 위한 교육’(17.98%), ‘정치가 육성 교육’(20%)을 학생들이 선호했지만, ‘취직을 위한 교육’(4.33%)에 대한 선호도는 극히 낮았다. 또한 학생들은 정치학 교육에서 가장 결여되어 있는 분야로 ‘철학’(35.54%)을 꼽았다. 이러한 결과에서 당시 정외과 학생들은 철저하게 아카데미즘을 지향하는 교육을 원하고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철학을 부전공으로 선택한 학생은 3% 정도에 불과했으며 경제학을 부전공으로 택한 학생이 가장 많은 점은 학생들의 욕구와 행동의 괴리를 보여주었다.

윤근식은 정치학 교육을 아카데미즘 교육과 테크노크라트 교육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산업화에 따라 점차 테크노크라트 교육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다. 학생들은 아카데미즘 교육을 선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행동에서는 테크노크라트 교육을 택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실제로 아카데미즘 교육이 지배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치학 교육

내용에 불만족인 학생이 65%를 넘는 기묘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와 같은 정치학 전공 대학생들의 욕구와 행동의 괴리는 1970년대의 사회적 분위기와 연관된다. 정치학자들이 장관이나 국회의원 등으로 정치계에 진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상황에서 학생들 또한 사법고시나 행정고시를 준비하며 미래의 테크노크라트를 꿈꾸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학 교육에서 아카데미즘을 충실히 구현하고자 하는 학자들이 겪는 딜레마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대학생 중에 극히 일부만이 대학원에 진학하여 공부를 계속하고 대다수는 곧바로 직업 전선에 뛰어들다는 점에 있었다. 모든 학생을 연구자로 만들기 위한 교육에도 문제가 있고 모든 학생을 사회에 내보내기 위해 준비시키는 교과 과정도 적합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연구와 교육이 분리되는 것이 자연스럽고 교과 과정은 서로 다른 목표를 가진 학생들을 위해 다양성을 추구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문제는 사회학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한국사회학』 17집(1983)은 ‘사회학교육의 현황과 과제’를 특집 주제로 정하고 사회학대회에서 발표된 다섯 편의 논문(고영복의 「한국사회의 발전과 사회학」, 임현진의 「사회학 이론 교육의 과제」, 권태환의 「사회학 방법론 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이동인의 「사회학 교과과정과 학부교육의 과제」, 한상진의 「사회학 대학원 교육의 문제점」)을 게재했다. 1970~1980년대에 전국 대학에 사회학과가 많이 늘어나면서 사회학교육의 현황과 과제를 살펴볼 필요가 증대한 것이 특집의 배경이 되었다.

이동인은 전국 25개 사회학과(1983년 기준) 중에 23개 학과의 교과 과정을 분석하였는데, 교과 과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다양하고 잡다하다는 것”이었다. 이는 사회학 교육이 다양한 목표를 위해 행해지기 때문이었다. 또한 대부분의 사회학과 교수들은 학생들이 교과 과정이나 강의 내용에 만족하리라 생각하지 않았다. 학생들은 강의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 문제, 사회 문제에 대한 해답 또는 해결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했지만, 교수의 강의나 교과 내용은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대학 교육에서 사회학을 전공하는 학생이 늘어나고 이들 중 대다수가 대학 졸업 후 곧바로 사회에 진출하는 점을 고려하면 응용 분야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증대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었지만, 이동인은 과연 그러한 요구에 따르는 것이 사회학 자체의 발전을 위해 바람직할지 의문을 표한다.

학부 교육에서의 이러한 딜레마는 대학원 교육에서 역으로 반복되었다. 1983년에 대학원 교육이 시행되는 사회학과는 9개뿐이었고 박사과정이 개설된 학과는 6개에 그쳤다. 따라서 대학원 교육은 학부 중심 교육에 밀려 주변적이고 지엽적인 것으로 취급받기 일쑤였다. 교수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데다가 학부 강의에 대한 부담이 커서 대학원 교육까지 관심을 쏟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교양 수준의 학부 교육과 전문적 지식의 생산을 위한 훈련이 필요한 대학원 교육이 제대로 분화되지 못하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학부 교육과 마찬가지로 대학원의 교과 과정과 학생들의 기대가 어긋나는 점에 있었다. 학생들은 대학원 강의를 졸업을 위해 형식적으로 수강해야 하는 것으로 여기고 실질적인 공부는 대학 바깥에서, 혹은 학생들끼리의 세미나나 공동 연구를 통해 추진하는 기형적인 모습을 보였다. 한상진은 이와 같은 대학원 교육의 빈곤 현상이 결국 한국 사회학의 주체성 문제와 연관된다고 지적한다. 교수의 연구 활동과 대학원 교육이 선순환 구조를 이루어서 한국 사회학의 발전에 공헌할 연구 업적을 내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해외 유학을 통해 박사학위를 받는 것을 당연시하고 해외 박사를 선호하는 풍토가 강력한 상황에서 대학원 교육의 강화는 쉽지 않은 일로 여겨졌다. 교과 과정이 반드시 담아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이론 교육이나 방법론 교육도 방향성을 지니기가 여의찮았다.

이처럼 한국정치학회와 한국사회학회가 1970~1980년대에 대학 교육의 체계화 문제에 골몰한 데 반해 한국경제학회에서 경제학 교육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이후의 일이다. 2001년 『경제학 연구』 49집 4호에서 ‘한국경제학 교육’을 특집으로 내세웠다. 안국신은 「경제원론 교육: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통해 대학생들이 경제학을 배울 때 경제학의 기초로서 가장 먼저 접하는 경제원론 과목에서 방대한 교재를 주입식으로 가르치는 방식이 일반화되면서 학생들이 경제학을 어렵고 재미없으며 실용성이 없는 학문으로 인식하게 된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두말할 필요 없이 쉽고 재미있게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고답적이고 오연한 경제학자들이 “구매자시장의 겸손한 판매자로 의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박명호는 「경제학은 딱딱한 학문이어야 하는가?」라는 논문에서 경제학계 일각에 경제학이 지나치게 형식화, 수리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음을 지적한 후, 과학성을 추구하는 딱딱한 경제이론이 경제현상의 해석 및 경제교육 측면에서 일반 대중과의 괴리를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큰 비용을 지불하는 문제가 있다고 비판한다.

1970~1980년대 대학 교육에서 아카데미즘을 지향하는 교육과 직업 전선에 뛰어들어야 할 학생들을 위한 응용 분야 교육 사이에서 고민하던 교수들은 1990년대 이후 대학, 대학원 교육이 급격하게 대중화된 상황을 접하면서 새로운 고민을 떠안게 되었다. 더 이상 대학 교육이 소수 엘리트에게 전문적 지식을 보급하거나 전문적 지식의 생산을 위한 훈련을 의미하지 않게 된 상황에서 대학 교육은 일반 시민을 위한 교육과 흡사한 형태를 띠기 시작했고 일차적으로 흥미를 유발하는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학회지의 전문적 지식 생산과 보급은 1990년대 이후 더욱 강화되었으나 전문 학회들이 1970~1980년대에 추구했던 아카데미즘 지향적인 대학 교육은 힘을 잃고 학생 수요를 더 많이 창출하기 위한 상업적인 교육 과정으로

대체되기 시작했다.

V. 맺음말

1970~1980년대에 ‘한국 사회과학의 토착화’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긴 했으나, 최신의 서구 이론과 방법론을 과학적이고 보편적인 지식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유지되었고 한국 사회과학사(史)의 정립은 먼 미래의 일로만 여겨졌다. 그러나 독창적이고 현실 적합성이 높은 지식을 생산하는 과제와 별개로 한국 사회과학사의 서술은 지금도 충분히 시도할 만하다. 우선 한국 사회과학의 역사를 단순히 일본을 경유한 독일 사회과학의 수용에서 미국 사회과학의 수용으로 전환되는, 서구 사회과학의 ‘수용사’로 접근하는 것을 지양하고 이론과 방법론의 선별적·대항적 수용, 전유(專有) 등 학술장의 복합적인 대응을 실증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사회과학자 집단이 실제로 수행한 학술 활동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어떻게 수용하고 변환했는지, 어떻게 활용했는지가 그 자체로 한국 사회과학사의 자료가 될 수 있다.

최근 한국 사회과학사와 관련하여 제출된 연구들은 대부분 서구 사회과학의 단순 수용이 아니라, 복합적인 대응에 주목하는 점에서 나름의 진전을 보인다.²⁴ 그러나 냉전기 동아시아 국가에 미국의 문화기구 및 민간재단이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²⁵나 과학적 사회조사, 근대화론 등 냉전 지식체계가

24 홍정완, 「전후 한국의 사회과학 연구와 근대화 담론의 형성」,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7); 정수복, 『한국 사회학과 세계 사회학』(푸른역사, 2022a); 정수복, 『아카데미 사회학의 계보학』(푸른역사, 2022b); 정수복, 『비판사회학의 계보학』(푸른역사, 2022c); 정수복, 『역사사회학의 계보학』(푸른역사, 2022d) 등.

25 김원, 「1960년대 냉전의 시간과 뒤틀린 주체」, 『서강인문논총』 38집(2013); 허은, 「미국의 문화냉전과 “자유 동아시아”의 구축, 연쇄 그리고 균열」, 『민족문화연구』

한국 사회과학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연구²⁶의 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여전히 한국 사회과학에 영향을 미친 외부 요인에 주목하는 경향이 강하다. 본고는 사회과학 지식 생산의 내적인 조건을 성찰하는 면에서 선행연구를 보완하며, 한국 사회과학사 중 제도사와 관련한 일부를 서술하는 데 의의가 있다.

대학의 학과와 전문 학회를 중심으로 한국 사회과학의 제도화 과정을 분석할 경우, 제도의 형식적 틀을 갖춘 것은 1960년대 이전이지만 실질적으로 제도가 체계화된 것은 1980년대를 전후한 시점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단순히 대학의 학과와 전문 학회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한 것만을 두고 제도화의 완성이라고 규정하기는 어렵다. 제도 자체의 정체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작업이야말로 제도화의 궁극적 단계라고 본다면 사회과학계의 역량이 급격하게 커진 1970~1980년대에 많은 연구자에 의해 한국 사회과학에 대한 성찰적 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연구와 교육에 대한 점검이 본격적으로 시도된 것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경제학계가 일찌감치 서구 이론과 방법론의 보편성을 따라잡는 쪽으로 발전 방향을 정한 데 반해, 정치학계와 사회학계에서는 사회과학의 보편성과 특수성 사이에서 논쟁을 벌였다. 그러나 이러한 논쟁은 추상적인 차원에 머무르면서 토론을 통한 일정 수준의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개방성과 다원성을 인정한다는 명목으로 서로 얼굴을 붉힐 만큼 치열한 토론으로

59권(2013); 정문상, 「포드재단과 동아시아 '냉전 지식」, 『아시아문화연구』 36집(2014); 정중현, 「아시아재단의 “Korean Research Center(KRC)” 지원 연구」, 『한국학연구』 40집(2016) 등.

26 조은주, 「1960년대 한국의 통계 발전과 지식 형성의 실천」, 『한국과학사학회지』 38권 1호(2016); 김인수, 「한국의 초기 사회학과 '아연회의'(1965)」, 『사이』 22호(2017); 김인수, 「냉전과 지식 정치」, 『동북아역사논총』 61호(2018) 등.

나아가지 않은 상태에서 각자 하고 싶은 연구를 알아서 하는 식으로 상황이 정리되었다. 즉 한국 사회과학의 전문적 지식이 어떤 형상으로 존재하며 어떤 방식으로 생산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 없이 연구자 개개인이 각자 나름의 전문성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전개된 것이다. 따라서 사회과학의 토착화 논의가 수그러든 이후 여전히 서구 사회과학의 최신 이론과 방법론을 얼마나 빠르게 습득하는지, 한국 사회에 얼마나 그럴듯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가 전문성의 척도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 제도의 정체성, 전문성을 기준으로 엄밀하게 따진다면 한국 사회과학의 실질적인 제도화와 전문화는 1990년대 이후에도 일정 부분 미완의 과제로 남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한 논의는 추후 별도의 연구에서 다루고자 한다.

참고문헌

1. 1차 자료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문교부, 『문교통계연보』.

한국경제학회, 『경제학연구』.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학』.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2. 단행본

강신표, 『한국사회학의 반성』. 서울: 현암사, 1984.

신현석, 『한국의 고등교육 개혁정책』. 서울: 학지사, 2005.

우마코시 토오루(馬越徹)(지), 한용진(역), 『한국 근대대학의 성립과 전개』. 파주: 교육과학사, 2001.

정수복, 『한국 사회학과 세계 사회학』. 서울: 푸른역사, 2022a.

_____, 『아카데믹 사회학의 계보학』. 서울: 푸른역사, 2022b.

_____, 『비판사회학의 계보학』. 서울: 푸른역사, 2022c.

_____, 『역사사회학의 계보학』. 서울: 푸른역사, 2022d.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학회 60년 연표(1952~2012)』. 2012.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대학의 성장유형과 학과분화에 관한 연구』. 1990.

한국사회과학연구협의회·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한국사회과학의 토착화: 연구 방법을 중심으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1979.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학회 50년사: 1957~2007』. 2007.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 50년사』. 2003.

3. 논문

고영복, 「한국사회의 발전과 사회학」. 『한국사회학』 17집, 1983, 3~11쪽.

구범모, 「비교정치학 20년의 반성」. 『한국정치학회보』 2집, 1967, 7~75쪽.

권태환, 「사회학 방법론 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한국사회학』 17집, 1983, 17~26쪽.

김경동, 「사회학」. 변형운 외, 『한국의 학파와 학풍』, 서울: 우석, 1982, 201~250쪽.

김규수, 「정치외교학과 학생에 대한 능력평가」. 『한국정치학회보』 12집, 1978,

189~201쪽.

- 김성국·임현진, 「한국사회와 사회과학: 한국사회학 대회의 공동토론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7집, 1972, 85~96쪽.
- 김원, 「1960년대 냉전의 시간과 뒤틀린 주체: 시민의 시간과 민족의 시간」, 『서강인문논총』 38집, 2013, 119~157쪽.
- 김인수, 「한국의 초기 사회학과 '아연회의'(1965): 사회조사 지식의 의미를 중심으로」, 『사이』 22호, 2017, 37~88쪽.
- _____, 「냉전과 지식 정치: 박진환의 Farm Management Analysis(1966)의 성립사정을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61호, 2018, 409~465쪽.
- 문승익, 「정외과 학생들의 태도분석」, 『한국정치학회보』 12집, 1978, 203~215쪽.
- _____, 「한국정치학의 정립문제: 정치이론의 경우」, 『한국정치학회보』 13집, 1979, 3~12쪽.
- 민준기, 「정치학」, 변형윤 외, 『한국의 학파와 학풍』, 서울: 우석, 1982, 111~158쪽.
- 박노영, 「아카데미사회학의 인식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주제적인 사회학을 지향하며」, 『한국사회학』 17집, 1983, 146~161쪽.
- 박동서, 「한국행정학의 현황과 역할」, 『한국정치학회보』 2집, 1967, 112~136쪽.
- 박명호, 「경제학은 딱딱한 학문이어야 하는가?」, 『경제학연구』 49집 4호, 2001, 339~356쪽.
- 박종한, 「The Evolution of the Management Class」, 『경제학연구』 10집, 1962, 121~142쪽.
- 변시민, 「회고」,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학회 50년사: 1957~2007』, 2007, 15~20쪽.
- 변형윤, 「경제학」, 변형윤 외, 『한국의 학파와 학풍』, 서울: 우석, 1982, 161~197쪽.
- 손제석, 「국제정치학의 연구 및 대학교육경향」, 『한국정치학회보』 2집, 1967, 102~111쪽.
- 신용하, 「한국사회학의 발전과 방향」,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논문집』 1집, 1976, 43~59쪽.
- _____, 「'독창적 한국사회학'의 발전을 위한 제언」, 『한국사회학』 28집 봄호, 1994, 1~12쪽.
- 신태환, 「한국경제학 50년의 회고」, 김진현(편), 『한국경제학의 모색』, 한국경제연구원, 1983, 13~23쪽.
- 안국신, 「경제원론 교육: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경제학연구』 49집 4호,

- 2001, 371~384쪽.
- 윤근식, 「정외과 학생들의 정치학교육에 관한 자체평가」. 『한국정치학회보』 12집, 1978, 235~250쪽.
- _____, 「사회비판적인 정치분석과 한국정치학」. 『한국정치학회보』 13집, 1979, 13~24쪽.
- 이동인, 「사회학 교과과정과 학부교육의 과제」. 『한국사회학』 17집, 1983, 27~34쪽.
- 이상백, 「사회과학 통합을 위한 시론」. 《사상계》 1959년 11월(76호), 1959, 192~215쪽.
- 이정식, 「한국정치 및 정치과정 연구현황」. 『한국정치학회보』 2집, 1967, 76~101쪽.
- 이종범, 「정외과 학생들의 이미지 분석」. 『한국정치학회보』 12집, 1978, 217~234쪽.
- 이현재, 「한국경제와 한국경제학」. 『경제학연구』 34집(별집), 1986, 3~6쪽.
- 임현진, 「사회학 이론 교육의 과제」. 『한국사회학』 17집, 1983, 12~16쪽.
- _____, 「21세기 한국 사회과학 바로 세우기: 반성과 과제」. 『사회과학연구논총』 창간호, 1997, 181~195쪽.
- 정문상, 「포드재단(Ford Foundation)과 동아시아 '냉전 지식」. 『아시아문화연구』 36집, 2014, 179~201쪽.
- 정종현, 「아시아재단의 “Korean Research Center(KRC)” 지원 연구: 사회과학연구 도서관(1956)/한국연구도서관(1958)/한국연구원(1964)으로의 전개를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40집, 2016, 57~107쪽.
- 조은주, 「1960년대 한국의 통계 발전과 지식 형성의 실천: 주한 통계고문단 (1958-1963)을 중심으로」. 『한국과학사학회지』 38권 1호, 2016, 213~238쪽.
- 최재석, 「한국의 초기 사회학: 구한말~해방」. 『한국사회학』 9집, 1974, 5~29쪽.
- _____, 「해방 30년의 한국사회학」. 『한국사회학』 10집, 1976, 7~46쪽.
- _____, 「1980년대의 한국사회학의 발전을 위하여: 1960, 70년대의 사회학연구태도의 반성」. 『한국사회학』 13집, 1979, 91~102쪽.
- 한상진, 「사회학 대학원 교육의 문제점」. 『한국사회학』 17집, 1983, 35~43쪽.
- 허은, 「미국의 문화냉전과 “자유 동아시아”의 구축, 연쇄 그리고 균열: 미국정부의 도서계획과 한국사회 지식인의 인식」. 『민족문화연구』 59권, 2013, 599~651쪽.
- 홍정완, 「전후 한국의 사회과학 연구와 근대화 담론의 형성」.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7.

국문초록

본고에서는 한국 사회과학의 분과학문 중 대표적인 사례로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의 제도화와 전문화 과정을 분석하였다. 대학의 학과와 전문 학회의 설립을 분과학문 제도화의 기본 조건이라고 규정할 때, 제도의 형식적 틀을 갖춘 것은 1960년대 이전이지만 양과 질 모두에서 실질적인 제도화가 진행된 것은 1970~1980년대이다. 이 시기에 전문 학회들은 저널리즘과 분리된 아카데미즘을 추구하였으며, 학회지 또한 초기의 일반 잡지 같은 형태에서 벗어나 전문 학술지의 정체성을 형성했다. 또한 정부의 정책으로 대학 제도가 팽창하면서 분과학문별 학과가 늘어났고 대학에서 전문직업인으로 자리 잡은 연구자들의 학술 활동이 확대되었다. 이와 같은 외적인 성장과 더불어 이 시기에 ‘한국 사회과학의 토착화’ 논의와 대학 교육 점검 등을 통해 한국 사회과학 전반에 대한 성찰이 본격적으로 시도되었다는 점을 제도화와 전문화의 중요한 요소로 평가할 수 있다.

투고일 2022. 6. 20.

심사일 2022. 7. 29.

게재 확정일 2022. 8. 12.

주제어(keyword) 사회과학(Social Sciences), 경제학(Economics), 정치학(Political Science), 사회학(Sociology),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

Abstract

Institutionalization and Specialization of Korean Social Sciences in the 1970s and 1980s: Focusing on Economics, Political Science, and Sociology
Kim, Sung-Eun

This paper analyzed the institutionalization and specialization of economics, political science, and sociology as representative cases of the disciplines of Korean social sciences. When defining the establishment of universities' departments and academic associations as the primary conditions for the institutionalization of disciplines, it was before the 1960s that an institutional framework was established. However, in the 1970s and 1980s, practical institutionalization took place in quantity and quality. During this period, academic associations pursued academicism separate from journalism, and their journals also formed an identity of academic journals, breaking away from the early commercial magazine-like form. Also, the university system was expanded by the government's policy. As a result, the number of departments has increased, and many researchers have been able to find employment in universities and actively engage in academic activities. In addition to such external growth, it can be evaluated as an essential factor of the institutionalization and specialization that reflection on the overall Korean social sciences was attempted in earnest during this period through discussions on 'the naturalization of Korean social sciences' and examination of university education.